

NH 이/슈/분/석

2025 한국 대선 공약별 금융시장·산업 영향 분석 (부제: Brand New KOREA)



투자전략부 김병연 (투자전략 총괄)
정여경 (한국경제)
이상준 (주식전략 Jr)
FICC리서치부 강승원 (채권전략)
권아민 (외환(FX))
기업분석부

2025 한국 대선 공약별 금융시장·산업 영향 분석

2025 한국 대선 공약별 금융시장·산업 영향 분석 (부제: Brand New KOREA)

- '25년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벤트는 통상 글로벌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내적 정책 기대감을 높이는 주요 이벤트로 작용할 것
- 여야 주요 정당 모두 2024년 추가경정예산 이후, '26년에도 확대 재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약 0.3%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단기금리 하락 압력을 강화하겠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연말 장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달러 흐름과의 연동성이 더 강할 것
- 산업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R&D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반도체/장비, AI, 바이오 등의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은 풍력·태양광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여가·문화 소비를 촉진할 주 4.5일제 논의는 서비스업 내수 확대에 우호적임. 반면, 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정당 간 입장 차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주택 정책은 양당 모두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소재 산업 수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장기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것을 기대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미 대선 전부터 금융 시장에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정책 실행을 확인되는 시점에 KOSPI 및 산업별 상승 모멘텀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내수·인프라·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전망이며, 대내적 요인에 더 민감한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
- 4분기 중후반경에는 미국 예산안 처리 및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차익 실현 욕구 확대 등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그럼에도 국내 정책 모멘텀은 이러한 외부 리스크에 대해 하방경직성을 부여하며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전망

대선과 금융시장,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효과를 기대

- 경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3%p 이상 상승시킬 것**. 정부의 소비 지원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 높겠으나, 정부의 투자 확대는 잠재성장률 제고할 것
- 주식: 이미 정책 기대감이 업종별로 선반영되고 있으나, 대선 이후 정책 실행을 확인되는 시점에 산업별 상승 모멘텀이 재차 강화될 전망. 내수·인프라·첨단 제조업 중심. 대내적 요인에 더 민감한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
- 금리: 정책공조 차원의 금리인하 가속화에 따라 **단기금리는 하방 압력 강화될 전망. 장기금리는 경기둔화 우려에 3분기까지는 하락 압력 우세하나, 연말로 갈수록 장기금리 반등할 전망**. 9월부터는 '26년 예산 편성 돌입하면서 정권교체와 '26년 확장 예산은 장기금리 반등 요인
- 환율: **정치적 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원화 강세에 긍정적 재료**. 다만 방향성 자체는 글로벌 달러와 연동될 전망

지표	현재(5월 9일)	전망
한국 GDP (%y-y)	-0.1% (1Q25)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3%p 제고할 전망
한국 기준 금리(%)	2.75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공조 차원에서 연내 금리인하 3번 전망(5,8,11월)
한국 국채 10년 금리(%)	2.67	3분기까지는 하락 압력 우세하나, 연말로 갈수록 장기금리 상승할 전망
원/달러 환율(원)	1,399	정치적 공백 해소와 내수진작 정책은 원화 강세에 긍정적
KOSPI(P)	2,577	내수·인프라·첨단 제조업 중심.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여야 공통된 대선 공약들의 분야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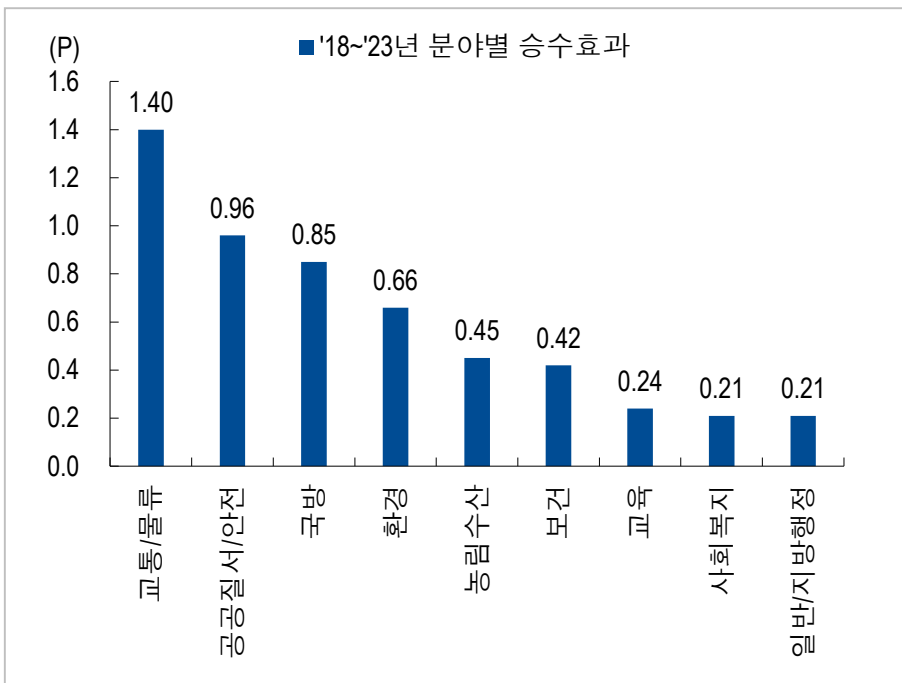
	공약	해당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 주택 공급 확대 -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규제 완화는 그동안 미루거나 포기했던 사업들의 추진을 촉진할 것 - 건설투자 진행은 연관 제조업(기계, 철강, 화학, 고무/플라스틱 등)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지역균형 발전	-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격차를 줄일 것	- 지역경기 활성화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긍정적
인프라	- 물리적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둔 인프라 투자를 공약 (ex. 고속교통망 확장)	- 고령화가 더 심화되기 이전에 지방 인프라(항만, 철도, 항공 등) 확장은 한국 생산성 향상을 이끌 것
과학기술	-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 - 국가 차원에서 AI 교육/인재양성에 투자	- 기술주에 우호적 - 정부의 R&D 지원과 인프라(전력/용수/도로) 조성, 세제 혜택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비용 부담 축소 요인
노동	- 주 4.5일제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	- 휴일 증가는 서비스 소비(외식·여행·문화·교육 등) 확대 요인
고용	- 정년 연장	- 고령층 계속 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분(연간 -0.33%p)을 부분적으로 만회(연간 +0.1%p)할 수 있을 것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추경: 핵심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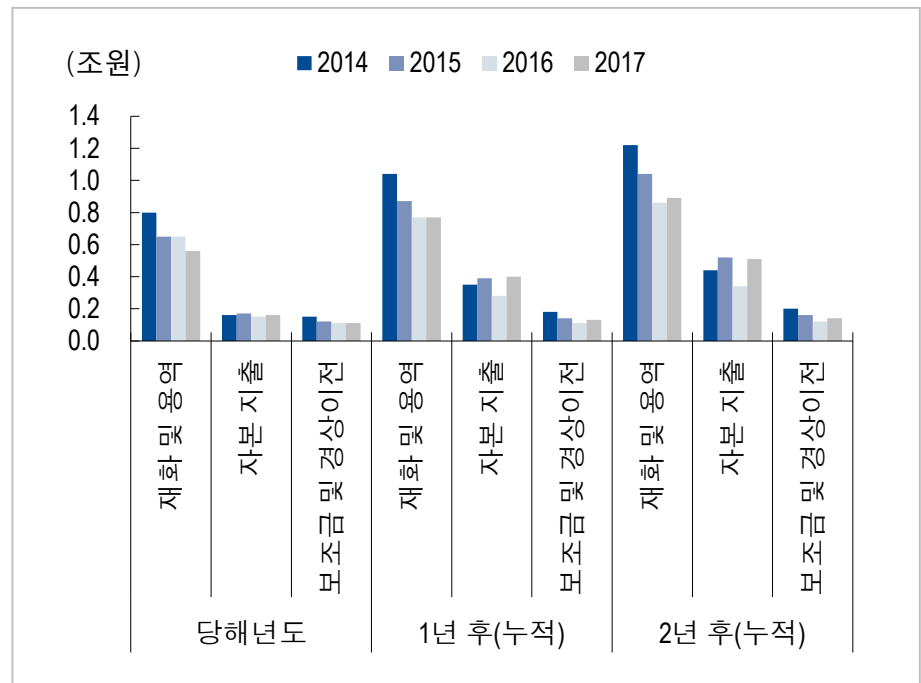
- 대선 국면에서 2차 추경 규모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음. 다만, 2월 초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 1차 추경 규모가 14조원으로 통과됨에 따라 2차 추경은 약 2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대규모 2차 추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선 3개월 후 '26년 예산안 편성 시기 임을 감안할 필요. 신정부는 이전 정부 예산 연도인 3분기보다 '26년 확장 예산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 KDI 등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재정 승수는 최대 6.7배 차이. SOC 투자 여부가 중요할 것
- 3분기까지 금리 하락 추세 유지. 다만, '26년 확장 예산 편성으로 인해 4분기 금리 반등 폭 확대 전망

분야별 승수 효과 추정치



자료: KDI,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영향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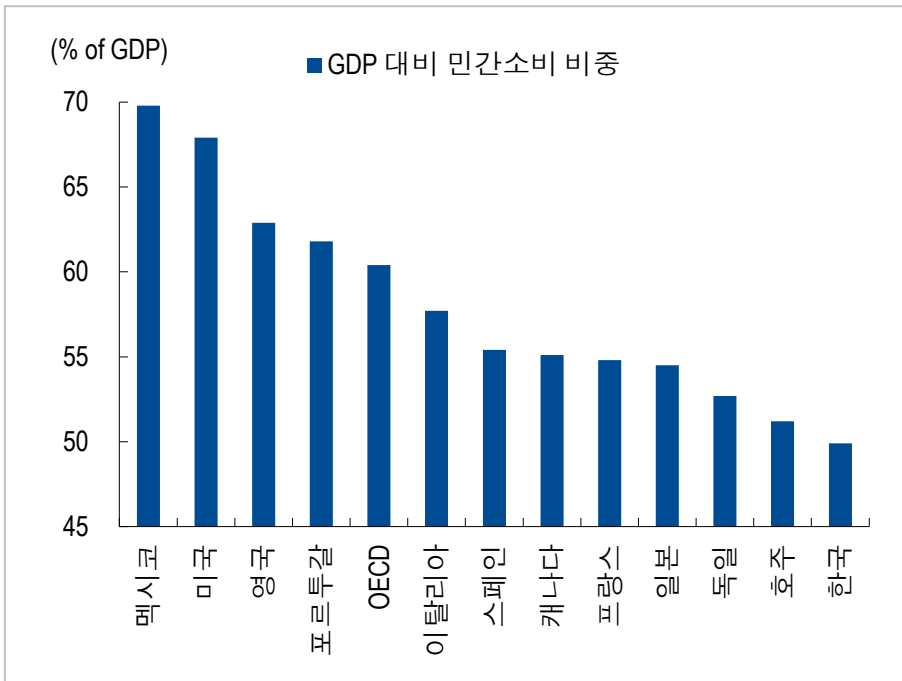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민간 소비를 위한 추경 효과는 장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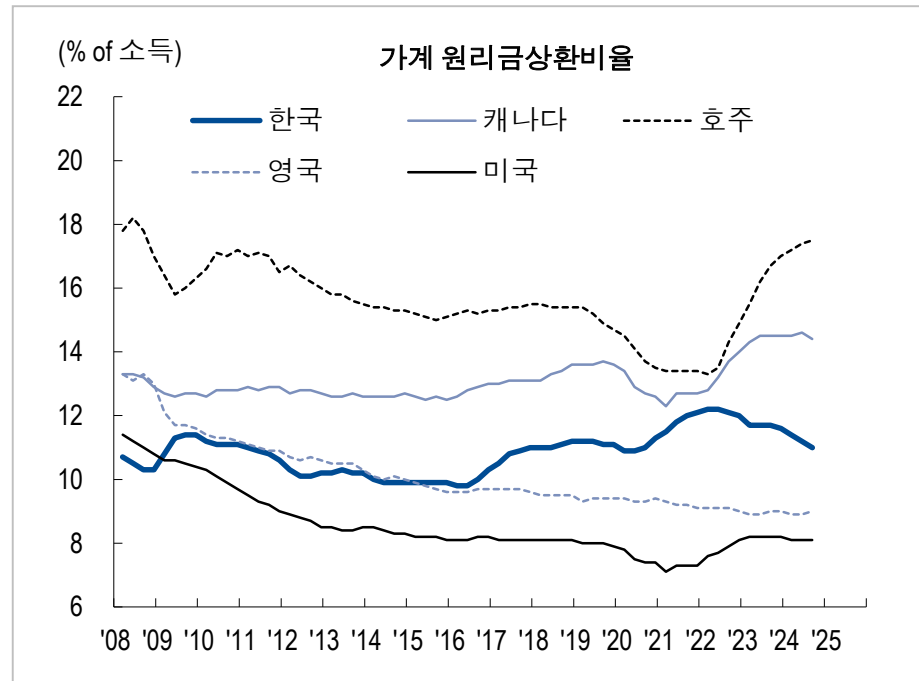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OECD국가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극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
-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GDP 대비)가 가장 큰데, 금리인상기에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질식시킨 결과로 판단
2025년 추경 집행을 통해 침체된 한국 민간소비를 지원할 필요 있겠으나, 추경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 높음
- 한국은 내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출이 흔들릴 때 경기방어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 그 결과 한국 정부지출 비중은 10년간 증가했고, 특히 정부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8%)은 미국과 중국보다 큼

한국의 민간소비 기반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약함



자료: OECD(2023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민간소비를 질식시킨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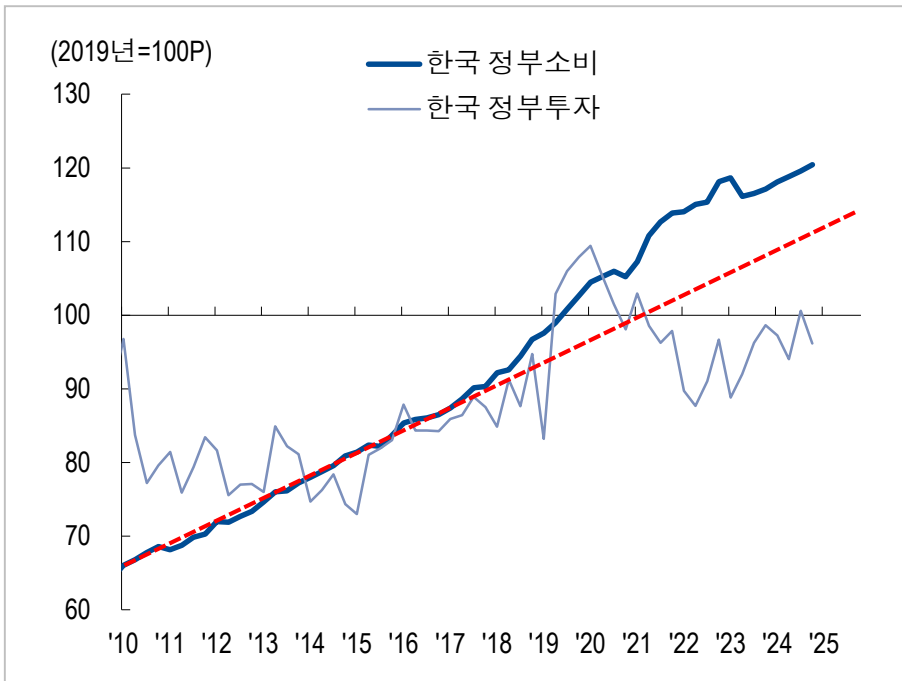


자료: 국제결제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재정 승수 효과가 큰 정부 소비/투자가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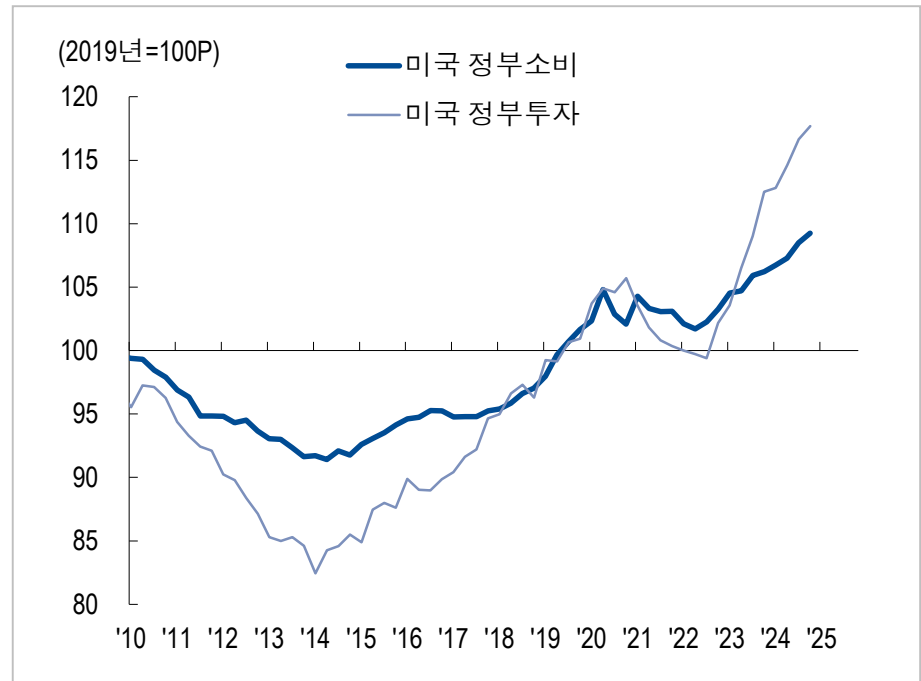
-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지출은 소비 위주였음. 한국 정부투자는 정체되었던 반면, 정부소비 확대 속도는 빨랐던 것으로 판단
반면, 미국은 정부투자 확대 속도가 정부소비 확대 속도를 능가했으며, 이는 미국 생산성 증대의 토대가 된 것으로 해석
-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17~'18년)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소비/투자의 재정승수는 0.68,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2로 추정**
즉, 정부가 1조원으로 직접 물건을 사거나 도로를 지으면 국내총생산이 6,800억원 늘어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2,200억원만 늘어남
- **한국도 정부지출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에 확대할 필요**

한국 정부지출은 소비에 초점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정부지출은 투자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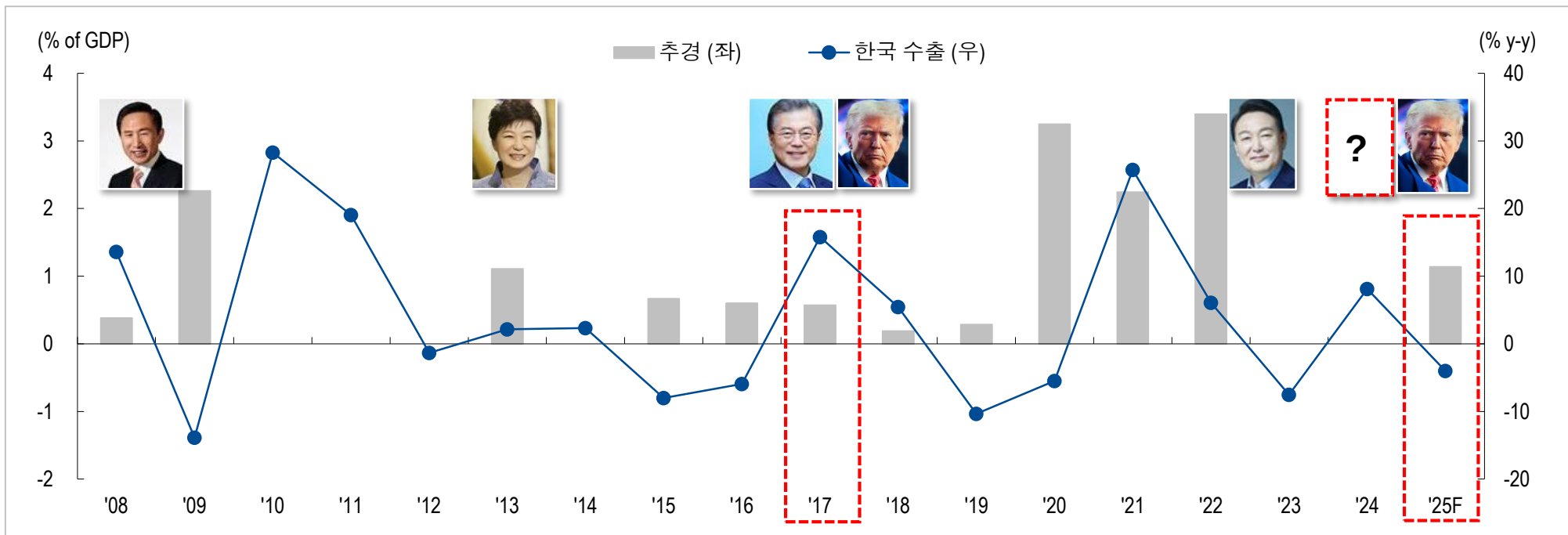


자료: 미국경제분석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7년과 2025년

- 2025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한국은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 돌입했음
- 2017년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 수출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고, 무역전쟁의 타깃도 중국에 한정되었음
2025년은 트럼프 무역전쟁의 타깃이 전세계로 확대. 한국은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트럼프와의 상호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음
- **트럼프 관세로 2025년 한국 수출이 -4%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상, 1.2% of GDP)은 내수 지지에 유의미한 규모로 판단**

2025년 수출 위축 국면에서 내수 부양책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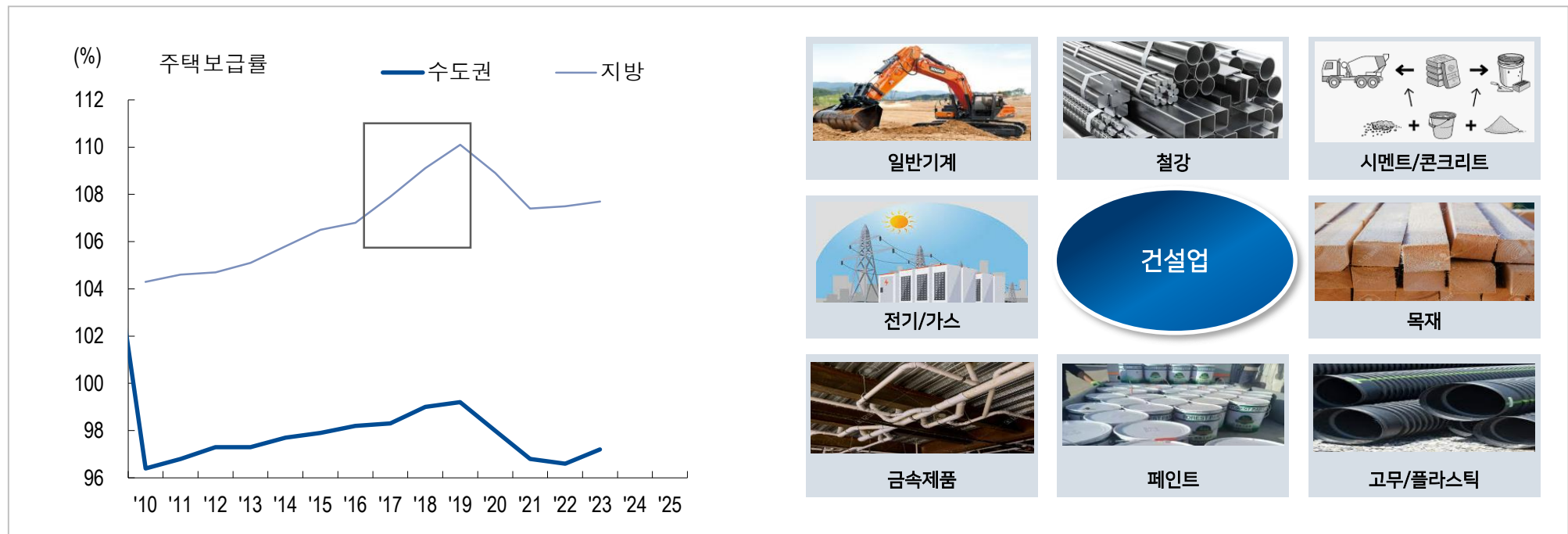


주: 25년은 추경 30조원을 가정한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사업 촉진

-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움
- 과거 2017~2019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경험. 해당기간 개발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었고, 개발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에서 주택단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산업이 촉진되었음
- 개발부담금이 완화되면 그동안 부담금 때문에 미루거나 포기했던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음. 수도권에서 착공 시점의 앞당김과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택투자 진행으로 연관 제조업(기계, 철강, 화학 등)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2017-2019년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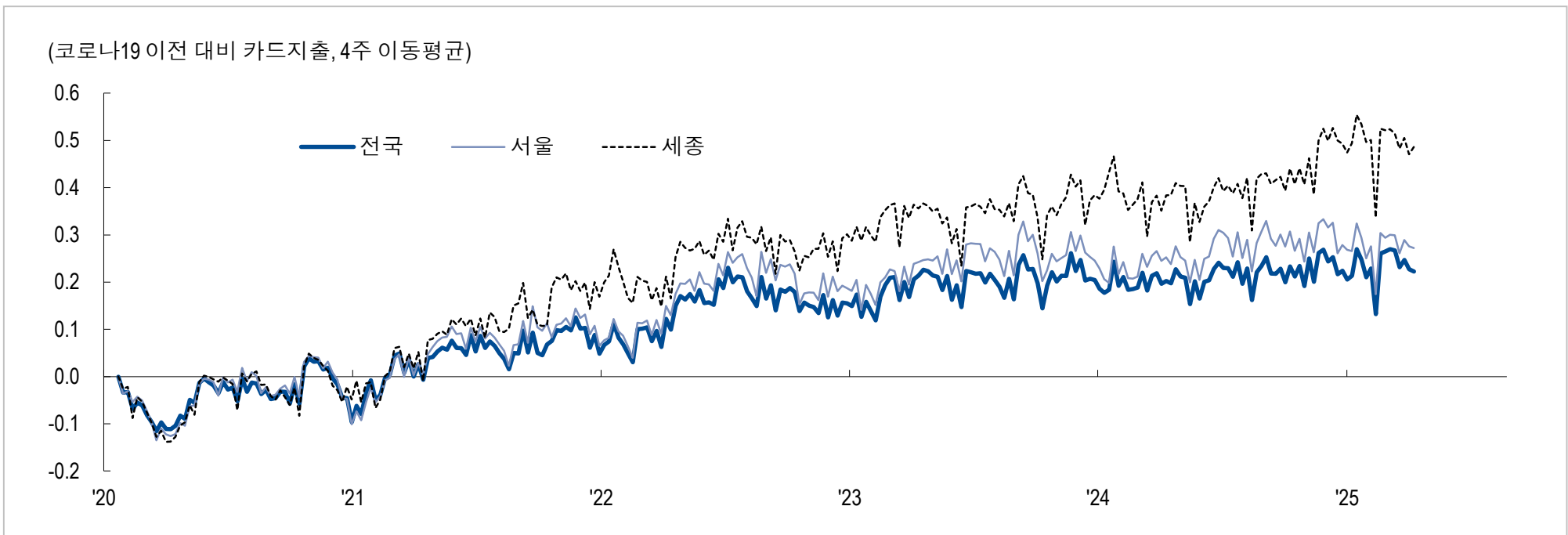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역 균형 발전: 소상공인 매출 확대

- 양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 지역경기 활성화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긍정적
-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이전으로 2012년 출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 역동성을 보이며 정부주도 개발의 소비 효과를 입증
세종시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소득·안정적 소득계층 비중이 높아 1인당 소비 여력이 크다는 특징
- 부울경 메가시티는 동남권 경제권 확대를 뒷받침할 것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장 → 일자리 생성, 창업 증가 →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가, 지역 소비 촉진)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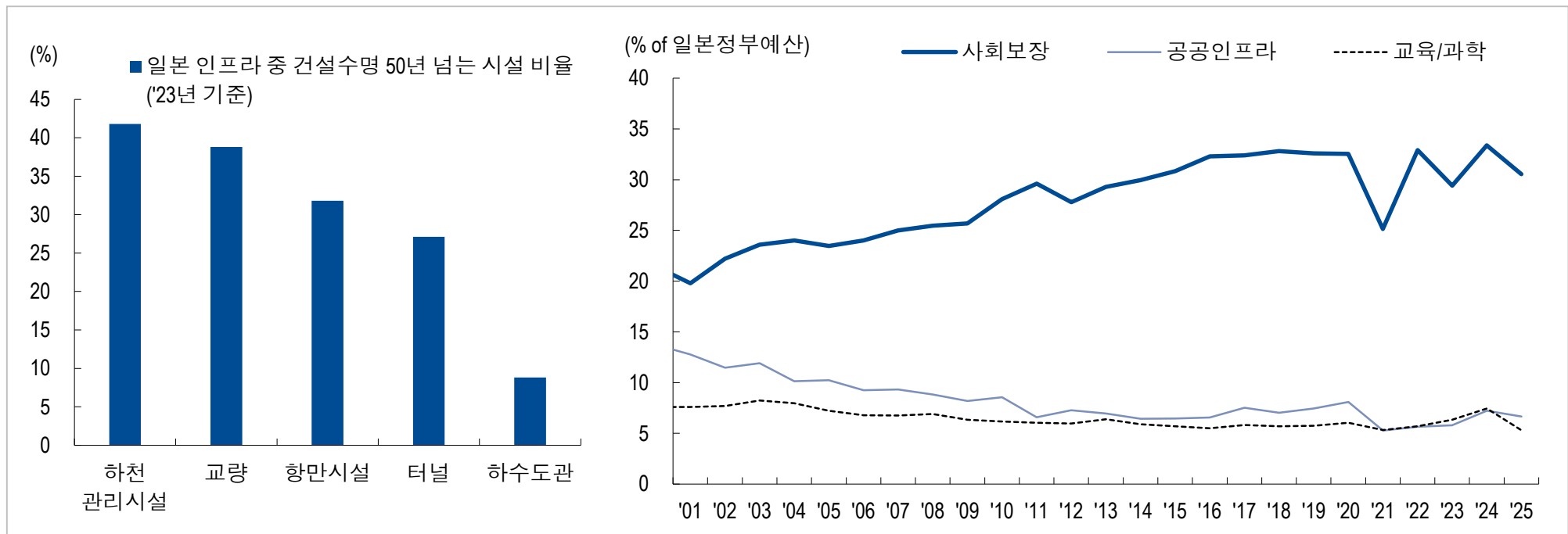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인프라: 고령화율이 더 높아지기 전에

- 양당은 물리적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둔 인프라 투자를 공약. 2024년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상회). **고령화율이 더 높아지기 전에 지방 인프라(항만, 철도, 항공 등) 구축은 한국 생산성 향상을 이끌 것**
- 일반적으로 인프라 건설수명은 50년으로 여겨짐. 일본 하천 관리시설, 교량, 항만시설에서 50년 이상되는 시설 비중은 30%를 상회. 고령화가 심화되면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연금, 의료, 복지 등)이 급증. 일본의 경우,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비가 정부 예산의 31%에 달하며 재정 부담이 큼. **결과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생산성 저하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

초고령사회에서는 인프라 건설/유지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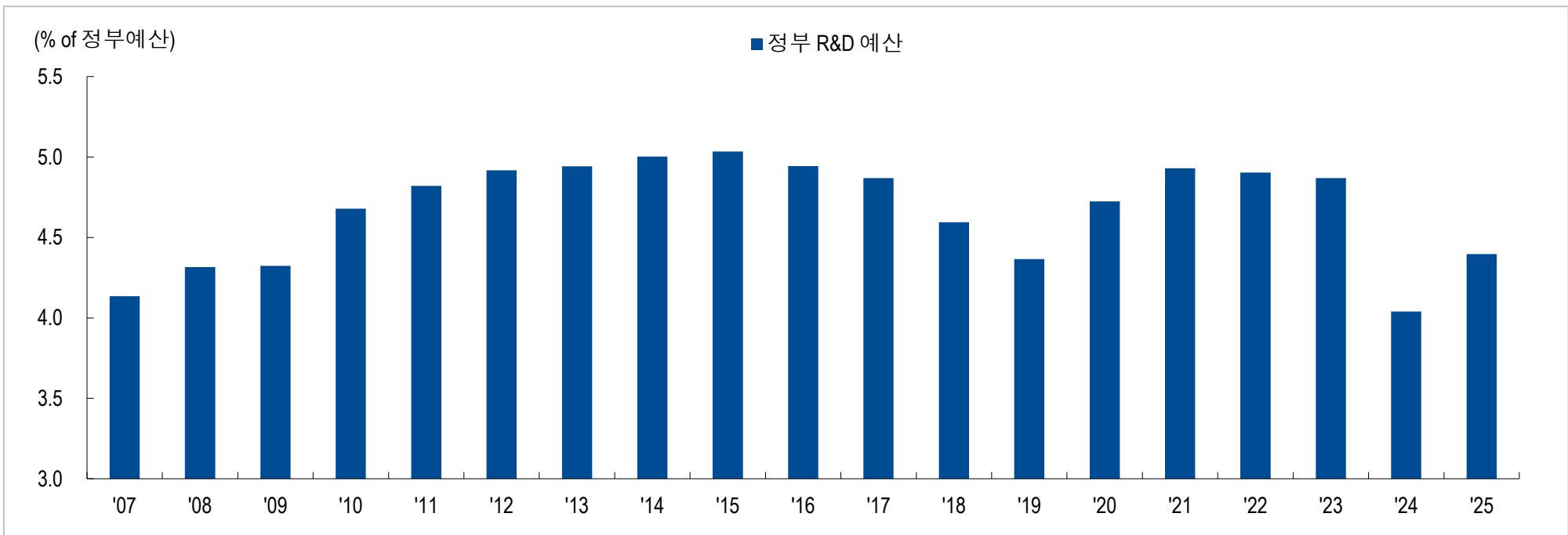


자료: 니혼게이지아이신문, 일본후생노동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대는 첨단제조업 경쟁력 제고

- 양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AI 교육/인재양성에 투자할 것을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확대하여 과감히 투자할 것을 공약
- 한국의 민간+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5% 수준. 2015년 이후 정부의 R&D 예산 비중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시차를 두고 잠재성장을 훼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 **정부 지출에서 R&D 예산 비중을 5% 이상 유지한다면, 이는 반도체, AI,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인**

정부 R&D 예산 비중은 2015년 이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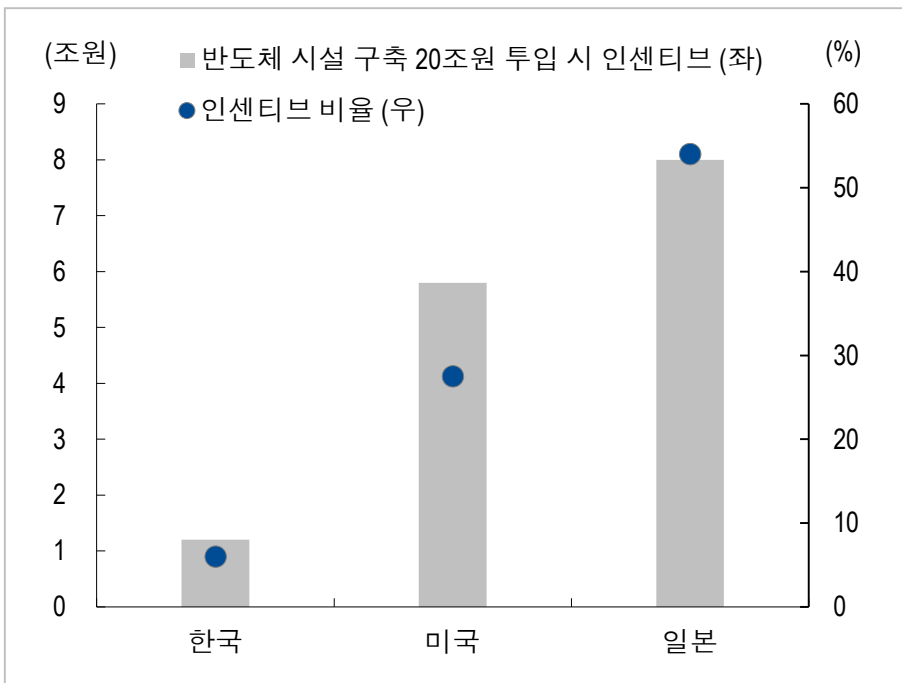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업: 반도체특별법

- 세계 각국 정부는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에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급 중. 중국은 2015년부터, 미국과 EU는 코로나19 이후 경쟁적으로 실행. 반면, 한국은 보조금 없이 세액 공제 15%만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음**
- 반도체특별법은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반도체 공장 신설과 증설에 용이. **정부의 R&D 지원과 인프라(전력/용수/도로) 조성, 세제 혜택은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전망**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국이 가장 낮음



주: 반도체 시설 구축 20조원 가정(부지/건물 6조원, 인프라설비 4조원, 공정장비 10조원), 인센티브는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합산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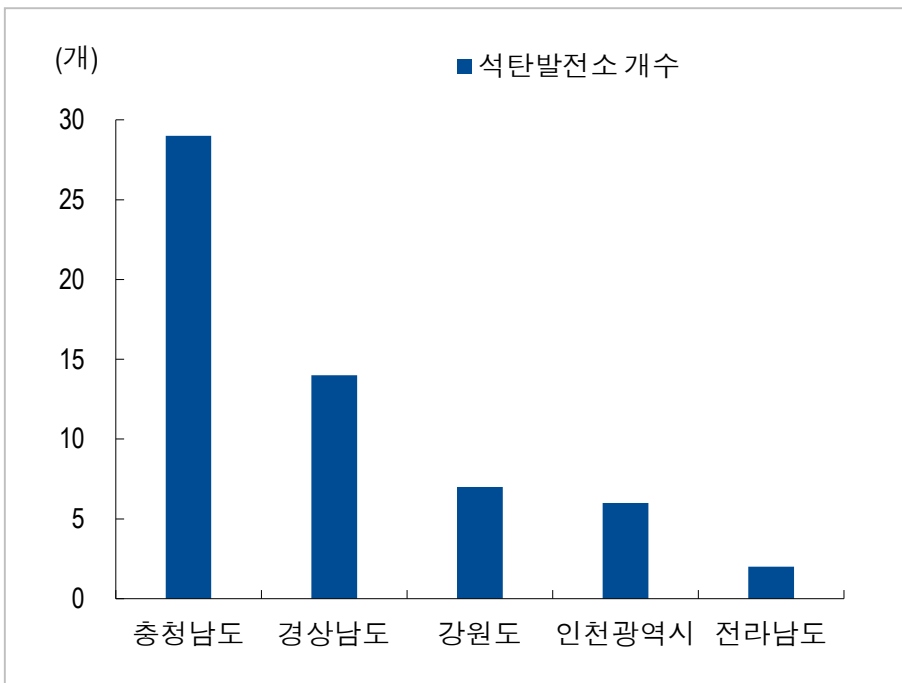
	내용
직접 보조금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 제공
세제 혜택	반도체 생산 및 판매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기반시설 지원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가 부담('25년 626억원)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투자 장려 및 연구개발 인력 지원
RE100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 위한 인프라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공급망 강화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반도체 공급망/클러스터 조성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에너지 전환: 사라지는 일자리 < 생성되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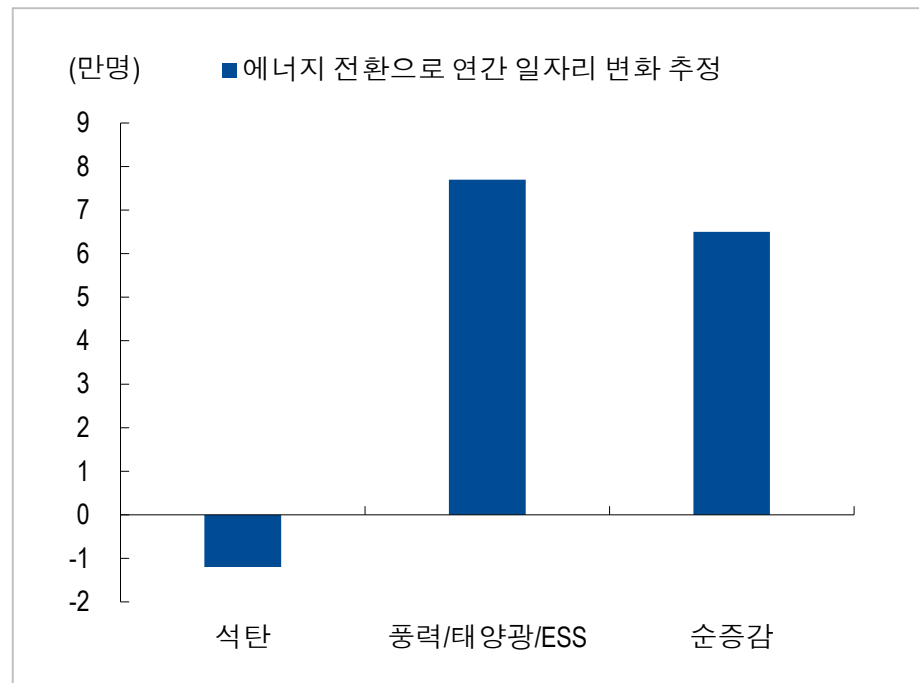
- 양당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 동의.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 석탄발전을 전면폐쇄할 것을, 국민의 힘은 원자력발전 활용을 극대화 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할 것을 주장
-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충남과 인천, 제조업 거점 도시인 경남에 집중되어 있음
- 친환경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 일자리 감소 요인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수소 등) 관련 일자리 증가 요인.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이 석탄 관련 일자리 감소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충남과 경남에 석탄발전소 집중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간 일자리 6.5만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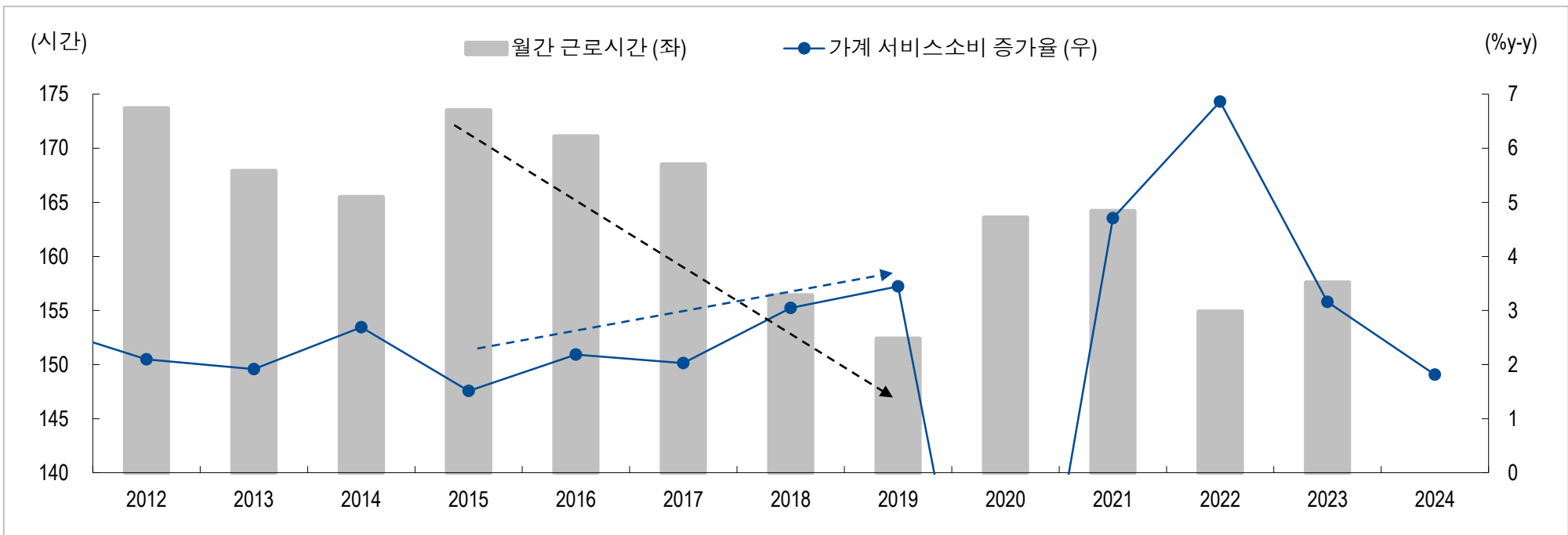


자료: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노동: 휴일 증가는 서비스 소비 확대 요인

- 양당은 주 4.5일제를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형,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지형)
휴일 증가는 서비스 소비(외식·여행·문화·교육 등) 확대 요인
- 2018년 한국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 주52시간 도입 당시 대기업 직업군 카드소비자는 주중에 취미/오락(+7%), 스포츠(+3%) 지출을 늘리고, 주말에 문화/예술(+5%), 여행(+2%) 지출을 늘렸던 사례
- 주4.5일제가 도입되면 주말이 2일에서 2.5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52시간 도입 당시보다 더 높은 서비스 소비 증가율 예상

근로시간과 서비스소비는 역(-)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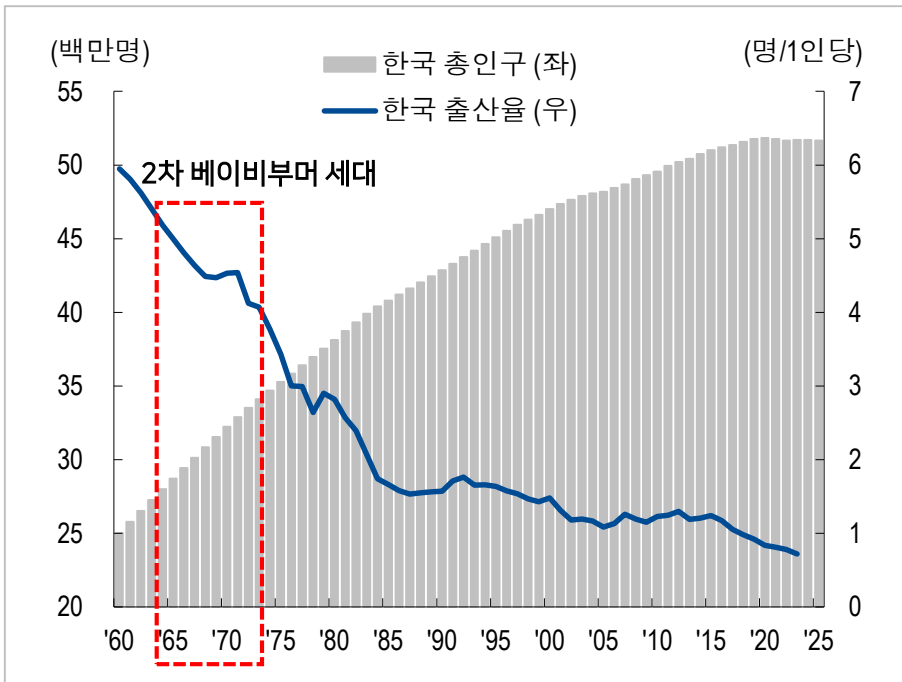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용: 고령층 근로는 경제성장을 하락을 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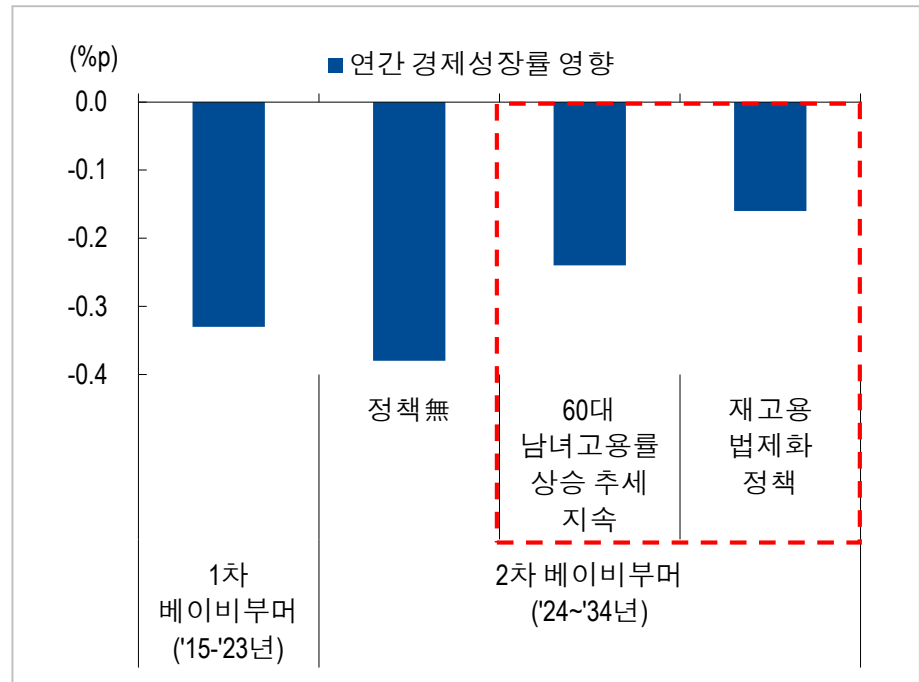
- 양당은 '정년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고령층 계속 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분(연간 $-0.33\%p$)을 부분적으로 만회(연간 $+0.1\%p$)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가 은퇴하기 시작하여 2034년까지 이어질 것
- 다만, 단순한 정년연장은 청년고용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자료: 한국통계청, 세계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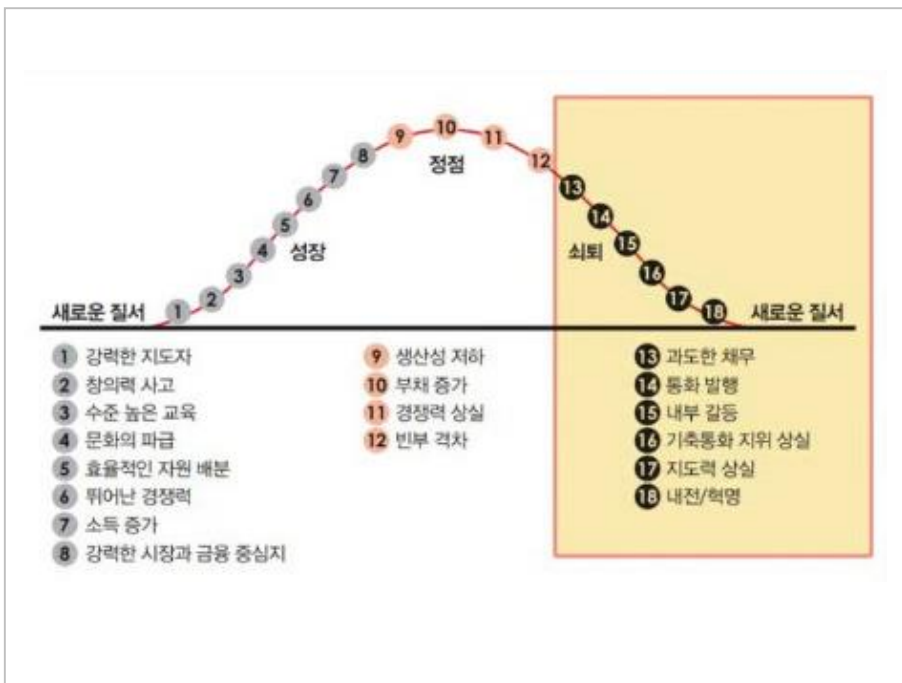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문/과학/기술, 금융 등의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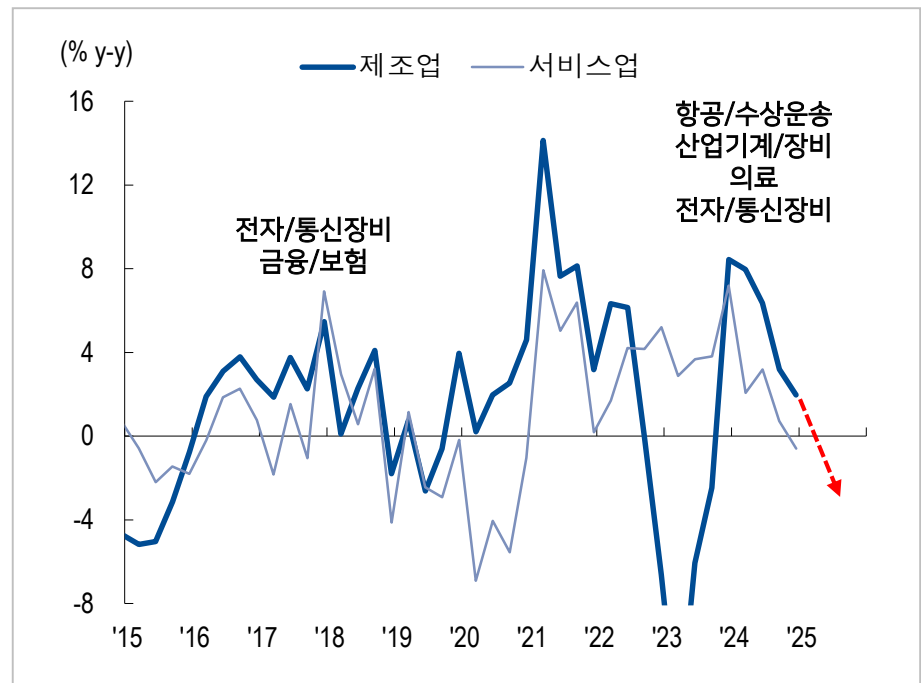
- ‘레이달리오’에 따르면 국가 쇠퇴단계는 생산성 하락에서 시작. 생산성 저하→ 경제전체 파이 감소→ 자원 배분을 둘러싼 계층 간 갈등 심화→ 정치적 극단주의와 표퐁리즘 득세→ 강성 지도자 등장으로 민주주의 위협으로 종결
-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전년대비)은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예술/여가 등을 중심으로 2024년 4분기에 마이너스(-) 전환
- 수출 하락 사이클로 인해 2025년 한국 제조업 생산성도 2025년 감소 전환될 전망. 반도체, 의료기기 제조와 전문/과학/기술, 금융 등의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 전략이 필요

국가 쇠퇴단계는 생산성 하락에서 시작



자료: <변화하는 세계 질서(레이달리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수출 하락 사이클로 인해 한국 제조업 생산성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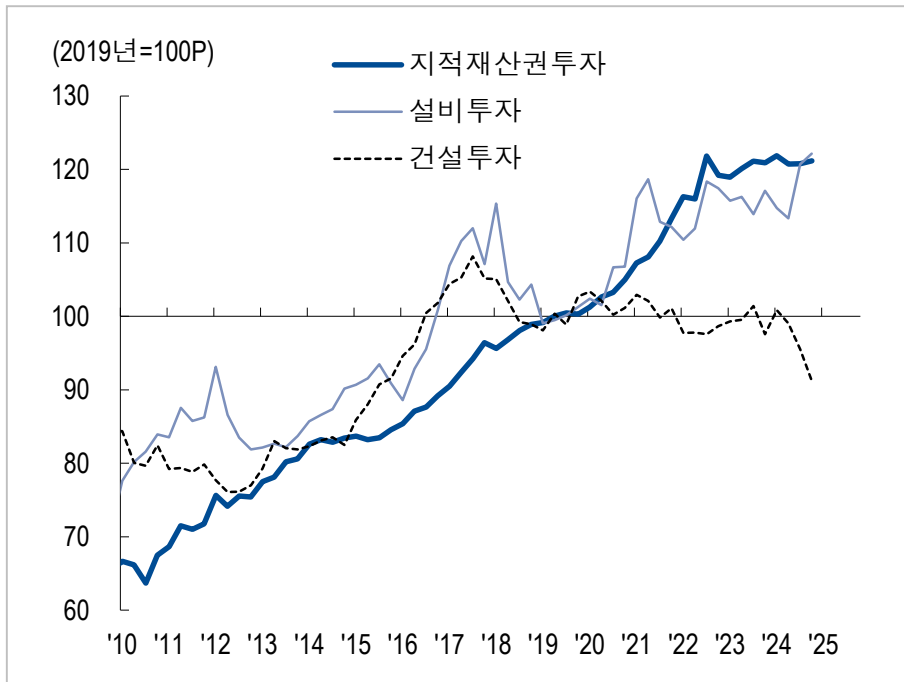
주: 노동생산성지수=산업생산지수/노동투입량지수*100

자료: 통계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적재산권 투자 확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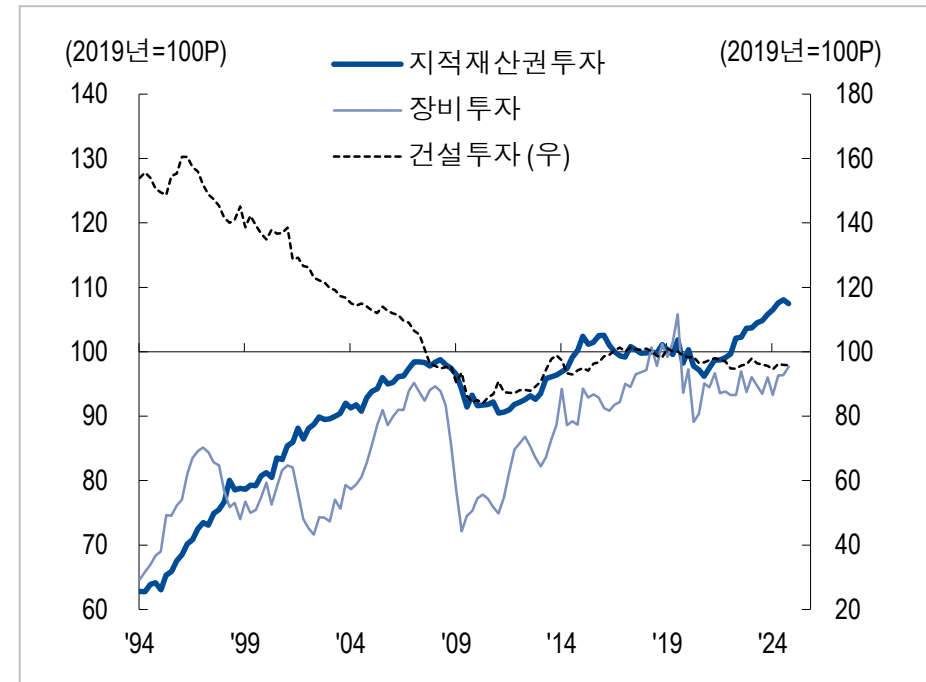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정부는 직접적으로 對美투자 확대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요구. 한국 기업들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2025년에도 철강, 자동차 업계의 對美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구조적으로 한국의 설비투자는 미국으로 유출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일본도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설비 해외 이전으로 장비투자가 정체되었으나, 지적재산권 투자는 2000년 중반까지 확대되었던 경험
- 한국의 지적재산권투자는 2022년부터 3년간 정체. **미국으로 유출되는 설비투자의 공백을 메우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투자 확대 여부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2022년 이후 한국 지적재산권 투자가 정체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일본, 제조업 설비 이전을 겪었으나 지적재산권 투자는 지속했음



자료: 일본경제사회연구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참고]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 복지 확대)

분류	공약	세부내용	금융시장
부동산 주거	공급확대	- 5년간 250만호 공급	공급확대는 - 건설경기 호재. 연관 제조업 수요 확대 - 주택가격 안정
	도심 재정비	-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 실현	
	4기 스마트 신도시	- 수도권에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를 조성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 공급 (청년 원가주택, 기본주택) -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반값 아파트 도입 검토	
지역 균형	공공기관 이전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충청권에 추가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 트라이포트(항만, 철도, 항공) 인프라 구축: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철도사업 추진, 북극항로 개척 &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GTX급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	과학/기술 /교육	-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 한국형 챗GPT 개발 - AI 100조원 투자(GPU 5만개 확보, 국산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세제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구축 - AI 인재 양성, 반도체/배터리 특화 학과 증설, 의대 정원 증원	기술주 강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교육산업 수요 ↑
	에너지	-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수소경제, 전기차)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강화	신재생·친환경 업종 ↑ 석탄·원전 업종 ↓
세제	공평과세	- 증세 가능성(법인세 인상 등) 시사,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 유지 - 상법 개정: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주식시장 신뢰 제고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노동 복지	근로 단축 고용 보호 복지 확대	- 정년 65세 연장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연금 개혁 - 노란봉투법(노조법) 재추진, 주4.5일제(실근로시간 단축형), 노동법원 설립 -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자의 부당해지 보호, 산재/고용보험 적용 강화 - 청년미래적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생애 1회 실업급여 - 아동복지: 영아수당 지급연령 확대(18세 미만까지 단계적) - 주거복지: 청년/무주택 서민 대상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공급	친노동정책은 - 임금·소비 증가 요인 - 기업 인건비 부담 ↑ 재정지출 증가로 - 국가채무 ↑, 국채금리 ↑ - 신용등급·원화가치 부담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참고] 국민의 힘: “성장하는 중산층” (규제 완화, 감세)

분류	공약	세부내용	금융시장
부동산 주거	규제 완화 금융 완화	- 재건축 완화, 소형주택 확대 - 청년타운·공유주택, 미혼청년 청약 확대 - 민간분양 기회 확대	공급확대는 - 건설경기 호재, 주택가격 안정 금융완화는 - 거래 활성화, 가계부채 ↑ 가능성
지역균형	교통 인프라	- 5대 권역(수도권, 대구경북, 부울경, 대전충청, 광주전남)에 GTX급 고속 교통망 확장 - 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 효율 제고	
산업	과학/기술 /교육	- 미래전략부 신설, AI 인재 1만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 STEAM 교육(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통합교육) 강화	기술주 호재
	에너지	- 에너지전환 속도 조절: 원전 활용 극대화, RE100 지원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탄소감축 기술 투자 - 전기요금 안정	전기요금 안정은 물가·국채금리 안정에 기여 전력(그리드) 관련주
세제	對개인	- 근로소득세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공제를 2배로 상향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2,000만원 → 3,000만원) - 간접세/기타 완화: 승용차/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	감세는 -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 성장률 ↑
	對기업	- 법인세 인하: 최고세율을 현행 24% → 21%로 인하	
노동 복지	유연화	- 노동시장 유연화, 주4.5일제(근로시간 유지형) -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 고령층 위한 출퇴근시간 무료버스 - 불법파업 엄정 대응, 노사 법치 강조 - 청년 일자리 창출(공공청년인턴 3만개, 일자리 주치의) - 청년도약법, 첨단산업 중심 일자리 확대 - 연금개혁(청년연장 연계), 결혼장려금, 주택 우대공급 - 한평생 복지계좌, 사회보장부 신설 - 학자금 상환유예, 늘봄학교 전국 확대	노동유연화는 - 기업 실적 개선 - 주가 상승 기대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산업] 한국 대선 공약들에 대한 업종별 영향

산업	주요 내용
반도체	-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 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산업 지원책 중 근로 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 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 높음
휴대폰/IT부품	- 양당 모두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따라서 레거시 제품보다는 AI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위주로 수혜가 집중될 전망
2차전지	-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내수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전망 - ESS는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해상풍력 20GW 구축과 전국에 RE100 산단 확대 발표로 수요 확대 전망
자동차	-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예상 - 2,000cc 이하 승용차 및 전기차 개소세 면제(국민의 힘):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득세 인하 정책을 강화. 소형차와 전기차에 한정
운송	-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이 동반되면서, 택배 물동량 회복 기대. 하반기로 가면서 탄핵,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저효과도 부각될 전망 -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전체 국제선 수송량의 30%를 차지하는 일본 노선 수송량이 감소할 수 있음
의류	- 내수 진작 정책 시 백화점, 대형마트, 가두점 등 주요 판매 채널에서 의류 매출 증가 예상
정유/화학	- 정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는 국제유가, 글로벌 수급 상황 등으로 국내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주	- 상법 개정 시(국회 통과 필요) 저평가 종목인 지주사 NAV 대비 할인율 축소 예상. 지주사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 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며 관련 디스카운트 요인 일부 해소 예상 - 내수 진작 정책 추진 시 내수 소비 관련 기업 수혜 예상
철강/비철금속	-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핵심 산업 공약으로 내세워 탄소배출 감축 추진. '30년까지 실증, '35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 -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지원,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 철강사들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화장품	- 최근 화장품 산업의 키폭터는 해외 수출로 구성. 국내 소비 진작 시 올리브영, 다이소 등 채널은 일부 긍정적 영향 있을 것으로 판단
제약/바이오	- 한국 대선 결과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차기 정부의 R&D 지원 정책, 경기 부양책 등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각 기업의 임상 진척 상황 등 기업 개별적 이슈 및 미국의 FDA 정책, 빅파마의 R&D 트렌드 등 글로벌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
유틸리티/재생에너지	- AI 산업 육성 시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원전, 가스의 전반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특히, 동해부터 서해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 에너지고속도로, 태양광, 풍력을 통한 지방 연금 강화, RE100 산단 조성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재차 기대. 다만 국내 주요 기업들은 국내 시장 노출도가 크게 감소하여,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소형 기업 또는 비상장 기업 중심으로 집중될 전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 증가로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 수혜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산업] 한국 대선 공약들에 대한 업종별 영향(2)

산업	주요 내용
음식료	-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통해 내수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면 음식료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 기대
항공우주/방산	- (더불어 민주당) 방산 수출컨트롤타워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공약 -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과 정책금융 체계 재편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 계획 - (국민의 힘)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 및 방산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건설	- (더불어 민주당) 4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기조가 뚜렷 -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될 것. 이에 따라 토목/SOC 부문의 착공 증가 예상 - (국민의 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지가가 높고, 용적률이 낮아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는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조선	-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방향성은 변함 없을 전망. 미국과 협력 강화 움직임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선 역량 확장 가속화 가능한국 대형 조선소와 미국 군함 조선소 간의 협력 확대. 일부 군함 생산 외주화도 추진될 전망
엔터	- (더불어 민주당) 2030년까지 문화산업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작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지원 등 K팝 산업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전 단계에 걸친 국가 지원 예고 - (국민의 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영상 중심에서 음악 등 콘텐츠 전방으로 확대 + 세액공제 비율 10%p 상향(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K팝 신인 및 중소기업사에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
미디어	-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기존 세액공제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5~15%에 대한 3년 일몰 공제였다면, 변경 세액공제는 공제 비율 확대 및 지원 범위 확대(웹툰, 웹소설 등)
레저/카지노	-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정책 및 대규모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외래객 유치 확대 시도 지속될 것 - 인바운드 중심의 정책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웃바운드 중심의 여행사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일 것. 카지노의 경우 외래객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 정부 및 민간 협업을 통한 외래객 천만 유치 목표. 대형 한류 이벤트, 쇼핑 관광 등 다양한 신규 관광사업 확대될 것
증권/STO	- 집권 초기 대체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기에 개인투자자 투자심리 개선 및 거래대금 증가 기대 -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하였기에 시장 개화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
유통	- 내수 소비 정책 시 유통업계 전반에 소비 트래픽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영향 기대
통신서비스/인터넷/게임	- AI 산업 전반적인 투자 확대와 GPU 5만개 구입 등에 따라 데이터센터 확대 전망. 통신서비스 업종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은행	-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확대 요구가 증가할 전망. 거론되는 금융 정책(기본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도 부담 요인. 실제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주택건설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 정책은 은행 가계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보험	- 기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중단될 경우 실손 손해를 개선 기대감 약화. 자동차보험료 인상 지연 가능성도 부담 요인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